

정부부처 기본계획의 소비자정책 유관성 검토

-제7차 소비자정책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시사점을 중심으로-

목 차

1. 서론	/01
2. 정부부처 기본계획의 유관성 검토	/11
3. 유관과제의 소비자정책 관련 주요 이슈 분석	/25
4. 시사점	/29

1. 서론

1.1. 검토 배경 및 필요성

- 소비자정책 기본계획은 우리 정부가 지향하는 소비자정책의 중장기적 추진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 수립하는 범정부 차원의 종합 정책계획임
 - 소비자정책 기본계획은 2009년에 제1차 소비자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한 것을 시작으로 3년 단위로 시행되어오고 있으며, 2027년은 제7차 소비자정책 기본계획이 시작되는 해임
- 제7차 소비자정책 기본계획(이하 7차 기본계획) 수립을 앞두고 7차 기본계획이 지향해야할 정책 수립의 방향과 기본계획에 포함될 과제 발굴을 사전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본격적인 정책 수립에 앞선 검토를 통해 환경변화를 반영한 정책 방향성을 모색하고 기본계획에 포함될 과제를 선제적으로 검토함으로써 기본계획의 내실화를 도모할 수 있음
 - 기본계획 과제를 발굴하는 방법으로는 기존 소비자정책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있던 과제를 재검토하는 방법, 타 부처의 기본계획 중에서 소비자정책과의 연관성이 높은 과제를 연계하는 방법, 시장 및 소비와 관련된 국내·외의 다양한 자료 분석을 통해 현안을 파악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과제를 설정하는 방법을 고려해볼 수 있으며, 이를 토대로 소비자정책 기본계획의 과제체계는 크게 고유과제와 현안과제로 구분됨
 - (고유과제) 소비자정책 추진주체 각각이 기본계획 추진기간 동안 수행해온 역할은 무엇인지(지속과제, 기수행), 또 소비자기본법이 명시한 소비자정책의 역할과 비교

하였을 때 그 수행내용이 충분하였는지 검토(보완과제)함으로써 소비자정책 기본계획을 통해 추진주체들이 수행해야 할 ‘고유과제’를 규명함

- (현안과제) 중앙부처가 개별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소비자정책 유관과제들을 기본계획의 추진과제로 연계(연계과제)하여 범정부 차원의 통합적 소비자정책 추진을 모색하는 한편, 시장환경 및 주요국·국제기구의 정책 동향 분석을 통해 소비자정책이 새롭게 대응해야 할 정책과제와 방안(신규과제)을 발굴·제시함

〈그림 1-1〉 소비자정책 기본계획의 수립 체계



□ 특히 타 부처의 기본계획을 검토하여 정책적 연관성을 확인하고 이를 토대로 과제를 발굴하는 것은 사회환경이 급변하고 해결이 어려운 난제(Wicked Problem)가 증가함에 따라 각 정책 간의 경계가 모호해지는 상황에서 유의미한 작업이 될 수 있음

○ 지속가능한 국가발전 및 국민안전·복리 증진을 위해 각 부처의 정책영역

에서 수립하는 기본계획은 우리 정부가 지향하는 거시적인 정책 방향성을 반영하고 범정부적 소비자정책의 수립을 위한 분석자료로서 가치가 있음

○ 더불어 타 부처의 기본계획 검토를 통해 소비자정책과의 유관성이 있는 과제를 발굴하는 것은 소비자정책의 정책적·전략적 위상 강화와 정책의 통합성 차원에서 의의가 있는바, 이는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음

- (소비자정책 범위의 확장) 최근 소비자문제는 디지털, 환경, 보건, 교통(자동차) 등 다부처 영역에서 발생하는 경향이 증가함에 따라 단일 부처 중심의 대응보다 통합적인 대응의 필요성이 높으며, 이를 위해 소비자정책의 경계를 확장하고 타 부처 정책에 소비자중심의 관점을 접목하기 위한 전략적 접근이 요구됨
- (국가정책의 효율성 제고) 소비자문제와 관련하여 다양한 부처에서 유사하거나 상호보완적인 정책을 추진하고 있을 수 있는바, 유관과제 발굴을 통해 소비자 정책 기본계획이 범국가적 정책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고, 부처 간 중복투자 및 비효율적 과제 추진을 방지하여 정책의 일관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는 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임
- (국민체감형 정책 설계) 타 부처의 기본계획을 소비자정책의 관점에서 재조명하여 소비자의 안전과 권익, 정보접근성, 선택권 등을 강화할 수 있는 요소를 찾아내고 이를 소비자정책 기본계획에 반영함으로써 소비자중심 정책 패러다임을 강화하는 데에 기여할 수 있음

1.2. 검토의 틀

□ 유관성 분석에 앞서 검토 대상이 될 기본계획의 주무부처를 먼저 선정함

○ 부처의 선정기준은 크게 두 가지가 고려되었는데, 첫 번째는 소비자정책위원회 위원기관¹⁾에 해당하는지 여부이며, 두 번째는 과거 소비자정책 기본계획

수립시 연계과제로 포함된 이력이 있는 기본계획의 주무부처인지 여부임²⁾

- 부처 선정기준에 근거하여 소비자정책위원회 위원기관 7개와 과거 소비자 정책 기본계획 연계과제에 포함되었던 기본계획의 주무부처 7개가 유관성 분석 대상 기관에 포함됨

- 위원기관 중 소비자정책 기본계획의 주무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는 제외하였으며, 6차 기본계획 수립시 연계과제에 포함되었던 기본계획의 주무부처로 법무부, 과학기술 정보통신부(이하 과기부),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 교육부,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보위)가 포함됨

- 분석대상 기관의 기본계획 중 2단계에 걸친 선별 과정을 통해 소비자정책 유관성 검토 대상 기본계획을 선정함

- 각 기관의 기본계획 중 1차 선별 작업을 통해 총 35개의 기본계획이 확보 되었으며, 시기적·내용적 유관성을 기준으로 한 2차 선별을 통해 총 30개 기본계획을 소비자정책 유관과제 검토 대상으로 선정함

- 1차 선별시, 각 기관 기본계획의 최신 회차를 기준으로 6차 소비자정책 기본계획 수립 당시 해당 기본계획이 연계과제 도출을 위한 검토 대상으로 포함되었거나 소관기관에서 해당 회차의 기본계획 내용을 공개하지 않은 경우(미발표 등) 등의 기준에 따라 검토대상에서 제외함

- 선별 과정을 통해 유관성 검토 대상으로 포함된 기본계획은 <표 1-1>과 같음

1)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은 '18년 4월 개정을 통해 소비자정책위원회 위원기관을 기존의 17개에서 8개로 그 범위를 축소함

- 소비자정책위원회 위원기관: 공정거래위원회,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 복지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2) 검토 여건상 모든 중앙행정기관의 기본계획을 검토하는 것은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으며, 소비자정책위원회 위원기관에 해당하는 부처와 과거 연계과제에 포함되었던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부처의 기본계획에서 소비자 정책과의 유관성이 높은 과제를 발굴할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는 판단하에 해당 기준을 설정함

〈표 1-1〉 소비자정책 유관성 검토 대상 기본계획

부처	기본계획명	회차 및 수행기간	부처	기본계획명	회차 및 수행기간
기획재정부	협동조합 기본계획	4차/'23-25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 기본계획	3차/'22-26
행정안전부	국가안전관리 기본계획	5차/'25-29		드론산업발전 기본계획	2차/'23-32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활성화 기본계획	4차/'23-25		장기주거 종합계획	3차/'23-32
농림축산 식품부	식생활교육 기본계획	4차/'25-29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과학기술 기본계획	5차/'23-27
	식품산업진흥 기본계획	4차/'23-27		전파진흥 기본계획	4차/'24-28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활성화 기본계획	2차/'22-26		3D프린팅산업진흥 기본계획	3차/'23-25
산업통상 자원부	제품안전관리 종합계획	5차/'23-25		정보통신진흥 및 융합활성화 기본계획 ³⁾	1차/'23-25
	지능형전력망 기본계획	3차/'23-27	문화체육 관광부	관광진흥 기본계획	6차/'23-27
	어린이제품 안전관리 기본계획	4차/'25-27		국민여가활성화 기본계획	2차/'23-27
여성가족부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	4차/'23-27	

부처	기본계획명	회차 및 수행기간	부처	기본계획명	회차 및 수행기간
보건복지부	환자안전 종합계획	2차/'23-27		양성평등 기본계획	3차/'23-27
	장애인정책 종합계획	6차/'23-28		청소년정책 기본계획	7차/'23-27
	보건의료기술육성 기본계획	3차/'23-27	식품의약품 안전처	식품 등의 기준 및 규격관리 기본계획	3차/'25-29
국토교통부	국가교통안전 기본계획	9차/'22-26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 종합계획	6차/'25-27
	스마트도시 종합계획	4차/'24-28		의약품·마약류 제조·유통관리 기본계획 ⁴⁾	'25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 기본계획	5차/'24-26

3) 해당 기본계획은 과거 「국가정보화기본법」을 근거로 하여 「국가정보화 기본계획」이라는 명칭으로 수행되었으나 근거법령이 「지능정보화 기본법」으로 전부개정(2020년)됨에 따라 관련 계획 또한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기본계획"과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을 종합하여 심의·의결 하는 것으로 변경됨

4) 의약품·마약류 제조·유통관리 기본계획은 매해 수립·발표

- 한편, 검토대상으로 선정된 기본계획의 소비자정책 유관성을 판단하고, 정책영역별로 분류하기 위한 프레임워크는 <표 1-2>와 같이 요약될 수 있음
- 소비자기본법에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을 규정하면서 위해의 방지(제8조), 계량 및 규격의 적정화(제9조), 표시의 기준(제10조), 광고의 기준(제11조), 거래의 적정화(제12조), 소비자예의 정보제공(제13조), 소비자의 능력 향상(제14조), 개인정보의 보호(제15조), 소비자분쟁의 해결(제16조) 등을 제시하고 있음
- 제6차 소비자정책 기본계획은 이러한 소비자기본법에 근거하여 소비자정책 영역을 ‘안전’, ‘거래’, ‘역량’, ‘피해구제·정책협력’으로 설정하고 있는 바, 본고에서는 6차 기본계획의 정책영역을 토대로 각 영역별 하위영역을 세분화하여 타 부처 기본계획의 유관성을 판단함

〈표 1-2〉 소비자정책 유관성 프레임워크

정책 영역	소비자기본법 상 근거 조항	소비자정책 하위영역	
		하위영역	내용
안전	제8조(위해의 방지)의 ①, ②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안전기준·법제 기반조성 시장감시 대응 - 안전관리, 위해정보 감시, 리콜 취약계층 보호 개인정보보호 안전정보·소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소비자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법령 및 안전기준의 설정 안전사고 예방, 위험성 평가 및 대응을 위한 시스템 구축 제품, 서비스, 환경에 대한 안전 점검 및 위해요소 포착, 리콜 취약계층의 안전한 소비생활을 위한 지원 거래 및 소비에 있어서 개인정보의 분실·도난·누출·변조 또는 훼손으로 인한 부당한 피해의 방지 안전관련 정보 확산
	제15조(개인정보의 보호) ①, ②항		
	제45조(취약계층의 보호) ①항		
거래	제9조(계량 및 규격의 적정화) ①, ②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표시·광고 거래적정화 - 특수거래, 전자상거래, 약관거래 및 온라인 거래 활성화에 따른 개인정보 관련 거래환경 개선 - 소비자지향적 법제 개선 노력, 취약시장에서의 소비자 편익 제고, 소비자중심경영, 상생협력환경조성(지속 가능소비, 소상공인, 생활협동조합) 신 시장·거래 유형 취약계층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품 및 서비스의 규격·표시 기준 설정 제품 및 서비스의 표시·광고 모니터링 소비자 보호를 위한 거래의 공정성, 계약의 투명성 강화 불공정 거래 및 사기 예방 전자상거래 및 디지털 거래의 규제와 소비자 보호 거래환경의 소비자지향성, 지속가능성 등의 사회적 가치 제고 새로운 유형의 시장 및 거래 원활화 취약계층의 거래 여건 및 소비 접근성 강화
	제10조(표시의 기준) ①항		
	제11조(광고의 기준)		
	제12조(거래의 적정화) ①, ②, ③항		
역량	제14조(소비자의 능력 향상) ①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소비자정보 - 정보제공: 정보제공 강화, 제공채널, 제공 방식(비교 정보, 빅데이터 분석) 다양화 관련 - 정보활용 소비자역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소비자의 권리 교육 및 정보 제공 건전한 소비를 위한 역량 및 정보활용 능력 강화 디지털 환경에서의 소비자 정보 접근성 강화 취약계층의 소비역량 강화 및 정보 접근성 보장
	제13조(소비자에게의 정보제공) ①, ②항		

정책 영역	소비자기본법 상 근거 조항	소비자정책 하위영역	
		하위영역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 인프라, 방식(학교, 대상별), 내용(디지털, 금융) • 소비문화: 지속가능소비, 기타(윤리적 소비 등) • 취약계층 	
피해 구제 · 정책 협력	제16조(소비자분쟁의 해결) ①, ②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해구제 - 분쟁해결제도, 소비자 피해 확산 방지, 소비자 상담, 소송 제도, 사업자 자율구제 관련, 피해자 지원 • 정책협력 - 부처, 지자체, 거버넌스(협의체), 글로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비자 피해에 대한 신속한 보상 및 해결 • 분쟁 해결 시스템 개선 • 피해자 지원을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
	제7조(지방행정조직에 대한 지원)		
	제21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②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처·지자체·민간·국외 등 다양한 주체 간 소비자정책 연계 및 협력 강화 • 소비자 권익 강화를 위한 공동 대응 체계 구축 • 상호 협력적 정책 수립 및 실행

- 또한 소비자정책과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과제의 키워드를 중심으로 내용 분석을 하여 소비자정책과 관련되는 주요 이슈를 파악하고, 최종적으로 향후 7차 소비자정책 기본계획 수립 시의 시사점을 제시함
-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선별한 과제의 내용분석을 통해 각 과제의 핵심 키워드를 부여하고, 키워드를 중심으로 주요이슈를 도출해냄
 - 세부과제의 내용 중 핵심 키워드를 최대 2개 추출하고, 키워드를 중심으로 유사한 주제군을 분류한 다음 각 주제군의 세부과제의 내용을 재검토하여 소비자정책 차원에서의 주요 이슈를 도출해냄
- 이와 같은 작업을 통해 타 부처에서 인식하고 있는 소비환경 및 정책 문제의 주요이슈와 방향성을 파악할 수 있는바, 이는 7차 기본계획 수립시 정책 방향성 설정과 연계과제 발굴에 유의미한 시사점을 제시할 수 있음

2. 정부부처 기본계획의 유관성 검토

2.1. 기본계획 유관성 분석 개요

□ 각 기관에서 수립하고 있는 기본계획들 중 소비자정책과 유관성이 있는 과제를 선별한 결과는 <표 2-1>과 같이 요약됨

○ 앞서 2단계의 선별과정을 통해 분석대상으로 선정한 30개의 기본계획 중, 24개의 기본계획에서 유관성이 있는 과제를 확인함

- 기재부의 ‘협동조합 기본계획’과 국토부의 ‘스마트도시 종합계획’, 과기부의 ‘과학기술 기본계획’, ‘전파진흥 기본계획’, ‘3D프린팅산업 진흥 기본계획’, 여가부의 ‘청소년정책 기본계획’은 소비자정책과의 직접적인 연관성이 낮은 것으로 검토됨

○ 각 기본계획의 세부과제 중에서 소비자정책과 유관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 과제는 총 161개인 것으로 확인됨

<표 2-1> 기본계획별 유관과제 수

부처	기본계획명	회차 및 수행기간	유관 과제 수	
기획재정부	협동조합 기본계획	4차/'23-25	-	
행정안전부	국가안전관리 기본계획	5차/'25-29	3	4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활성화 기본계획	4차/'23-25	1	
농림축산식품부	식생활교육 기본계획	4차/'25-29	4	10
	식품산업진흥 기본계획	4차/'23-27	2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활성화 기본계획	2차/'22-26	4	
산업통상자원부	제품안전관리 종합계획	5차/'23-25	24	45
	지능형전력망 기본계획	3차/'23-27	5	
	어린이제품 안전관리 기본계획	4차/'25-27	16	

부처	기본계획명	회차 및 수행기간	유관 과제 수	
보건복지부	환자안전 종합계획	2차/'23-27	12	24
	장애인정책 종합계획	6차/'23-28	10	
	보건의료기술육성 기본계획	3차/'23-27	2	
국토교통부	국가교통안전 기본계획	9차/'22-26	13	36
	스마트도시 종합계획	4차/'24-28	-	
	자동차정책 기본계획	3차/'22-26	15	
	드론산업발전 기본계획	2차/'23-32	4	
	장기주거 종합계획	3차/'23-32	4	
과학기술정보 통신부	과학기술기본계획	5차/'23-27	-	4
	전파진흥 기본계획	4차/'24-28	-	
	3D프린팅산업진흥 기본계획	3차/'23-25	-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활성화 기본계획/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	1차/'23-25	4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진흥 기본계획	6차/'23-27	5	7
	국민여가활성화 기본계획	2차/'23-27	2	
여성가족부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	4차/'23-27	2	3
	양성평등 기본계획	3차/'23-27	1	
	청소년정책 기본계획	7차/'23-27	-	
식품의약품 안전처	식품 등의 기준 및 규격관리 기본계획	3차/'25-29	12	25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 종합계획	6차/'25-27	7	
	의약품·마약류 제조·유통관리 기본계획	'25	6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 기본계획	5차/'24-26	3	3

2.2. 소비자정책 영역별 유관과제 검토 결과

2.2.1 안전 영역 유관과제

- 안전 영역과 유관성이 있는 것으로 검토된 과제들 중 안전기반 조성과 관련되는 과제가 21개로 가장 많았으며, 시장에서의 위해정보에 대한 감시 및 대응과 관련되는 과제가 20개, 시장에 감시를 통한 안전관리와 관련되는 과제가 15개 순으로 나타남
- 부처별로 살펴보면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가 31개, 국토부가 22개, 식약처가 20개, 복지부가 7개의 안전 유관 과제를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각 부처의 정책영역이 산업 및 인프라, 제품, 식의약품의 안전과 환자 및 장애인의 안전 확보를 위한 정책의 소관부처라는 특성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됨
- 안전 영역의 하위영역별 유관과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안전기반 조성 유관과제는 주로 안전사고의 예방 및 위험성을 평가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내용을 포함하며, 부처별로는 국토부 11개, 문체부 3개, 산업부 2개 순으로 확인됨
 - 주요 과제의 내용으로는 국토부의 경우 미래자동차 및 자율주행, 중고자동차 등 자동차 관련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관리체계 구축 과제를 수립하고 있으며, 문체부는 안전한 관광 및 여가활동을 위한 기반 조성 과제를, 산업부는 어린이 제품의 안전한 소비 및 이용을 위한 과제를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위해정보 감시 유관과제는 제품 및 서비스, 환경에서의 위해요소 포착 및 대응 방안을 주로 담고 있으며, 부처별로는 산업부가 10개, 식약처가 7개, 국토부가 2개 순으로 확인됨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산업부에서는 주로 제품의 리스크평가를 활성화하고 위해 상품의 유통 및 판매를 차단하기 위한 과제를 다수 수립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식약처는 식품원료 및 첨가물, 기구 등의 위해성을 평가하기 위한 과제를 다수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 안전관리 유관과제는 각 제품 및 서비스의 안전성조사 및 관리방법을 개선하기 위한 내용을 포함하며 산업부와 식약처가 6개, 국토부와 복지부,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가 각 1개의 과제를 수립하고 있음
 - 산업부의 경우 신기술 및 신수요 제품의 안전관리, 어린이제품의 안전성 조사 강화 등의 과제를 수립하고 있으며, 식약처는 어린이 식생활 및 의약품 제조·유통에서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과제들을 주로 수립하고 있음
- 안전기준·법제 유관과제는 주로 제품 및 서비스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각종 법령 및 기준 설정을 주요 내용으로 하며, 부처별로는 산업부가 7개, 국토부에서 4개, 복지부가 2개 순으로 과제를 포함하고 있음
 - 산업부의 경우 제품의 안전인증 기준 설정 및 시험방법, 어린이제품의 안전성 강화를 위한 기준 개선 과제 등이 확인되며, 국토부는 친환경차량 및 자율주행차의 안전기준 고도화를 위한 과제를, 복지부는 보건의료기관의 안전관리 기준 설정 관련 과제를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안전정보·소통 유관과제는 제품 및 서비스의 안전 정보를 확산하는 내용이 주를 이루며, 산업부가 4개, 국토부와 식약처가 각 2개, 복지부가 1개의 과제를 포함하고 있음
 - 산업부는 수요자 중심의 제품안전정보 및 어린이제품 안전 정보 제공 및 활용 활성화를 위한 과제를 주로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며, 식약처는 기준규격 및 유해오염물질 관련 정보제공 체계 구축을 위한 과제를, 국토부는 철도안전 정보 제공 관련 과제를 수립하는 것으로 나타남

- 리콜 관련 과제는 하자제품의 리콜과 관련된 것으로, 국토부가 2개, 산업부가 1개의 과제를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국토부는 자동차 리콜 심의기구의 전문성 및 투명성 강화와 신속한 리콜 이행을 지원하는 과제를, 산업부의 경우 국내에 유통되는 해외 리콜제품의 모니터링 및 조치를 강화하기 위한 과제를 수립하고 있음
- 취약계층 유관과제는 안전취약계층의 안전강화를 위한 과제가 해당되며, 복지부가 2개, 산업부가 1개의 과제를 수립함
 - 복지부는 장애인의 보행보조용 의자차(휠체어) 인정범위를 확대하고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을 마련하기 위한 과제를 수립하고 있으며, 산업부는 취약계층의 제품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제품 공통기준 수립 과제를 설정함
- 개인정보보호 유관과제는 소비영역에서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과제로, 개보위에서 2개 과제를 수립함
 - 개보위에서는 소비 분야별·업종별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민간협업 기반 자율규제를 확대하는 과제와 다크패턴 등 신유형의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대응체계 마련을 위한 과제를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표 2-3〉 안전 영역별 유관과제 현황 및 수행 기관

하위영역	과제 수	수행 기관
안전기반조성	21	국토부(11), 문체부(3), 산업부(2), 행안부(2), 농식품부(1), 복지부(1), 과기부(1)
시장감시 대응 (위해정보 감시)	20	산업부(10), 식약처(7), 국토부(2), 문체부(1)
시장감시 대응 (안전관리)	15	산업부(6), 식약처(6), 국토부(1), 복지부(1), 농식품부(1)

하위영역	과제 수	수행 기관
안전기준·법제	14	산업부(7), 국토부(4), 복지부(2), 식약처(1)
안전정보·소통	9	산업부(4), 국토부(2), 식약처(2), 복지부(1)
시장감시 대응 (리콜)	3	국토부(2), 산업부(1)
취약계층	3	복지부(2), 산업부(1)
개인정보보호	2	개보위(2)

2.2.2 거래 영역 유관과제

□ 거래 영역과 유관성이 있는 것으로 검토된 과제들 중 소비자지향적 거래환경 개선 관련 과제가 11개로 가장 많았으며, 취약계층의 거래 및 표시·광고와 관련되는 과제가 각 9개 순으로 나타남

○ 부처별로 살펴보면 복지부가 9개, 식약처가 8개, 국토부와 산업부가 각 6개의 거래 유관 과제를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주로 각 부처의 소관영역인 제품, 보건의료, 의약품, 모빌리티, 전력 등의 거래와 관련된 과제를 설정하고 있으며, 특히 복지부는 보건의료서비스의 소비자지향적 거래를 강화하고 다양한 영역에서 장애인의 거래 여건 및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한 과제를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 거래 영역의 하위영역별 유관과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소비자지향 유관과제는 소비 및 거래 환경의 소비자지향성을 강화하기 위한 과제들이 주로 포함되었으며 산업부가 4개, 국토부가 3개, 식약처가 2개, 복지부와 과기부가 각 1개의 과제를 수립하고 있음

- 주요 과제를 살펴보면, 산업부는 지능형전력망 시장에서 소비자의 선택권 및 참여기회를 확대하여 수요자 중심의 전력시장을 구축하기 위한 과제를 다수 설정한 것으로 확인되며, 국토부는 중고차차 소비자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자동차 보험과 관련한 소비자 부담의 완화, 임대차 주거시장에서의 정보비대칭 해소를 통한 안전성 제고 과제를 수립하고 있음
- 취약계층 유관과제는 취약계층의 거래 여건 및 소비 접근성의 강화를 위한 과제가 해당되는데, 복지부가 7개, 문체부가 2개의 과제를 포함하고 있음
 - 복지부의 경우, 장애인의 문화예술, 미디어, 교통수단 등 다양한 거래 및 소비 영역에서의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과제들을 수립하고 있으며, 문체부는 관광 및 여가에 있어 취약계층의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한 과제를 수립함
- 표시·광고 유관과제는 제품 및 서비스의 규격·표시 기준을 설정하고 불공정 광고를 모니터링하는 등의 과제가 해당되며, 식약처가 6개, 국토부와 산업부, 여가부가 각각 1개의 과제를 수립함
 - 주요 과제로는 식약처는 식품원료 정보의 표준체계 및 기준규격 DB구축, 주요 식품정보의 광고 제한, 의약품의 표시·광고 개선 등의 과제를 수립하고 있으며, 국토부는 침수차의 이력 공개 및 침수기준 가이드라인 설정을 위한 과제를, 산업부는 어린이제품 표시사항을 자동생성하는 시스템 구축을 위한 과제를 수립하고 있음
- 신시장·거래 유형 유관과제는 새로운 유형의 시장 및 거래가 적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한 과제들이 주를 이루며, 국토부가 2개, 산업부와 과기부가 각 1개의 과제를 포함함
 - 국토부는 배송시장에서 드론을 활용한 배송서비스가 상용화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과제를 수립한 것으로 확인되며, 산업부는 지능형 전력망 시장에서 에너지 프로슈머를 활성화하기 위한 과제를 수립한 것으로 나타남

- 상생협력 거래환경 유관과제는 소비자와 판매자, 생산자 등 다양한 주체들 간의 상생협력에 기반한 거래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과제들로, 농식품부가 2개, 과기부가 1개의 과제를 수립함
 - 농식품부는 지역농산물의 거래에 있어 소비자와 생산자 간의 관계지향형 직거래를 육성하고, 로컬푸드의 사회적 가치를 제고하기 위한 과제를 수립하고 있으며, 과기부는 민간주도의 플랫폼 자율기구 구축을 통해 공정한 플랫폼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과제를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 지속가능 거래환경 유관과제는 지속가능한 거래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과제로, 복지부와 문체부가 각각 1개의 과제를 수립함
 - 복지부는 지속가능한 보건의료제도를 위한 의료기술 및 서비스의 최적화 방안을 모색하는 연구과제를 수립하고 있으며, 문체부는 저탄소 관광산업 및 지역주민과 상생·공존 등 지속가능한 관광생태계 구축을 모색하는 과제를 수립하고 있음

〈표 2-4〉 거래 영역별 유관과제 현황 및 수행 기관

하위영역	과제 수	수행 기관
거래환경 개선 (소비자지향)	11	산업부(4), 국토부(3), 식약처(2), 복지부(1), 과기부(1)
취약계층	9	복지부(7), 문체부(2)
표시·광고	9	식약처(6), 국토부(1), 산업부(1), 여가부(1)
신 시장·거래 유형	4	국토부(2), 산업부(1), 과기부(1)
거래환경 개선 (상생협력환경)	3	농식품부(2), 과기부(1)
거래환경 개선 (지속가능성)	2	복지부(1), 문체부(1)

2.2.3 역량(정보) 영역 유관과제

- 역량(정보) 영역과 유관성이 있는 것으로 검토된 과제들 중 소비자 교육과 관련되는 과제와 정보제공 강화 관련 과제가 각 5개, 소비문화 조성 및 취약계층 역량 강화 관련 과제가 각 2개인 것으로 분석됨
- 부처별로 살펴보면 농식품부 5개,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와 산업부, 여가부가 각 2개, 국토부와 복지부, 식약처가 각 1개의 역량(정보) 유관 과제를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주로 각 부처 정책영역에서의 안전 및 소비 관련 정보 제공과 교육을 통한 역량 강화를 모색하는 과제를 수립한 것으로 확인됨
- 역량(정보) 영역의 하위영역별 유관과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소비자교육 관련 유관과제는 소비자의 건전한 소비생활과 권리 보호를 위한 교육을 제공하는 것으로, 농식품부가 2개, 행안부와 산업부, 여가부가 각 1개의 과제를 수립하고 있음
 - 농식품부는 주로 농식품 소비자의 건강한 식생활을 위한 대상별 교육 및 체험 과제를 수립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행안부는 재난 안전을 위한 다양한 체험 중심의 교육을, 산업부는 어린이제품 안전 교육을, 여가부는 국제결혼중개업 피해예방을 위한 교육을 제공하는 과제를 수립함
 - 정보제공강화 관련 유관과제는 제품 및 소비생활 관련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디지털 환경에서의 정보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행안부와 국토부, 농식품부, 여가부, 식약처가 각 1개의 과제를 수립함
 - 행안부의 경우 공공데이터의 개방 및 활용을 강화하기 위한 과제를 수립하였으며, 국토부는 자동차안전도평가 결과를 의무적으로 게시하도록 하여 소비자 중심의 홍보를 확대하는 과제를 수립한 것으로 나타남. 그밖에 식품관련(농식품부) 정보

및 난임치료시술 관련 정보(여가부), 어린이·청소년 대상 고카페인식품주의정보(식약처) 등을 제공하는 과제를 수립하고 있음

○ 지속가능한 소비문화 관련 유관과제는 농식품부가 2개의 과제를 수립함

- 해당 과제는 다양한 체험 및 현장 교육을 통해 지속가능한 식생활의 실천력을 강화하고 지역 먹거리의 가치를 확산하기 위한 과제들로 확인됨

○ 취약계층의 소비역량 강화 및 정보 접근성 제고 관련 유관과제는 산업부와 복지부가 각 1개의 과제를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

- 산업부는 취약계층별로 특화된 제품안전 인식을 제고하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과제를 수립하였으며, 복지부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역량교육을 통해 정보격차를 줄이고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과제를 포함함

〈표 2-5〉 역량(정보) 영역별 유관과제 현황 및 수행 기관

하위영역		과제 수	기관
역 량	소비자교육	5	농식품부(2), 행안부(1), 산업부(1), 여가부(1)
	소비문화 (지속가능)	2	농식품부(2)
	취약계층	2	산업부(1), 복지부(1)
정 보	정보제공 강화	5	행안부(1), 농식품부(1), 국토부(1), 여가부(1), 식약처(1)

2.2.4 피해구제·정책협력 영역 유관과제

- 피해구제·정책협력 영역과 유관성이 있는 것으로 검토된 과제들 중 다양한 주체 간 거버넌스와 관련되는 과제 및 글로벌 정책협력 관련 과제가 각 6개, 피해구제에 있어 분쟁해결 및 피해자 지원 관련 과제가 각 3개 순으로 나타남
- 부처별로 살펴보면 복지부와 국토부가 각 7개, 산업부가 6개, 농식품부와 개보위가 각 1개의 피해구제·정책협력 유관 과제를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상당수가 각 소관 영역에서의 다양한 주체들과의 정책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과제에 집중된 것으로 확인됨
- 피해구제·정책협력 영역의 하위영역별 유관과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다양한 주체 간 거버넌스 관련 과제는 소비자단체 및 민간주체와의 협의체 구축 및 소통 강화를 통해 정책협력을 추진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며, 복지부가 4개, 산업부와 농식품부는 각 1개의 과제를 수립하고 있음
 - 복지부의 경우, 환자·소비자단체와 환자안전 인프라를 구축하고 정기 간담회를 추진하는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범정부 환자안전 거버넌스를 구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확인됨. 산업부는 안전한 어린이제품 유통환경 조성을 위해 온라인쇼핑몰 협의체를 구성하고 이를 확대·강화하기 위한 과제를, 농식품부는 소비자단체와의 연계를 통해 지역농산물 직거래 협력체계를 고도화하는 과제를 수립하고 있음
 - 글로벌 정책협력 관련 과제는 해외국가 및 기관과의 소비자정책 연계 및 협력을 강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며, 국토부와 산업부, 복지부가 각 2개의 과제를 수립하고 있음

- 국토부는 자동차 소비자 보호 및 안전도 강화를 위해 안전기준의 국제조화 및 국제활동의 확대를 추진하는 과제를 수립하였으며, 복지부는 주로 국제기구 및 국외 유관기관과 환자안전을 위한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환자안전 정보의 연계 및 교류를 추진하는 과제를, 산업부는 국제적 환경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안전기준의 최신화 및 해외시험결과의 수용을 확대하고 관련 기관 및 소관 정책의 국제적 영향력을 높이기 위한 과제를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부처 간 정책협력 유관과제는 부처간 정보 공유 및 소통 활성화를 통해 정책 실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산업부가 2개의 과제를 수립함
 - 산업부는 비관리제품의 규제공백 해소를 위해 부처간 정보공유를 활성화하고 협의회를 추진하는 등의 과제를 수립하는 것으로 확인됨
- 분쟁해결 관련 과제는 소비자 피해 및 분쟁 해결을 위한 대응방안을 주요 내용으로 하며 국토부 2개, 개보위가 1개의 과제를 수립함
 - 국토부는 자동차 소비자 보호제도 확립을 위해 자동차 교환 및 환불체계를 고도화 하는 과제를 수립하는 한편, 주택 하자에 대해서는 처리절차의 표준화를 통해 하자 관리를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확인되며, 개보위는 실효성 있는 개인정보 분쟁 조정제도 운영을 위한 과제를 수립하고 있음
- 피해자 지원 유관과제는 피해자 지원을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하는 과제들이 포함되는데 국토부가 3개의 과제를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국토부는 철도사고 피해자 지원을 위한 과제와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거권을 보장하고 일상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과제를 수립하고 있음
- 지자체 정책협력 유관과제는 부처와 지자체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며, 복지부와 산업부가 각 1개의 과제를 수립함

- 복지부는 환자안전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함에 있어 지자체와의 협력을 통해 중장기 전략을 수립하고자 하며, 산업부는 불법제품 단속의 실효성 강화를 위해 지자체와의 협력을 추진하는 것으로 나타남

〈표 2-6〉 피해구제·정책협력 영역별 유관과제 현황 및 수행 기관

하위영역		과제 수	기관
피해구제	분쟁해결	3	국토부(2), 개보위(1)
	피해자 지원	3	국토부(3)
정책협력	거버넌스(협의체)	6	복지부(4), 산업부(1), 농식품부(1)
	글로벌	6	국토부(2), 산업부(2), 복지부(2)
	부처간	2	산업부(2)
	지자체	2	산업부(1), 복지부(1)

3. 유관과제의 소비자정책 관련 주요 이슈 분석

□ 소비자정책 유관과제의 내용 및 주요 키워드 분석을 통해 소비자 정책과 관련되는 주요 이슈가 무엇인지 살펴봄

- 유관과제별로 주요 키워드를 선정하고, 유사한 의미 및 주제를 내포하는 키워드를 중심으로 과제를 재취합하여 내용을 종합한 결과, 크게 디지털 대전환 시대의 정책 지향, 사회적 가치의 실현, 공정한 소비환경 강화가 주요 이슈로 도출됨

3.1. 주요 이슈 1: 디지털 대전환 시대의 정책 지향

□ 디지털 대전환(Digital Transformation) 시대에서 소비자정책 전 영역에 걸쳐 데이터·정보 활용의 중요성과 디지털 신뢰의 확보가 강조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 (데이터 기반) 각 부처는 제품 및 서비스, 소비, 거래 등과 관련되는 데이터·정보를 다방면으로 수집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정책 체제로 전환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주요 키워드로는 빅데이터, 데이터 기반 조사, AI 기반 분석, 알고리즘 등이 확인됨
- 관련 과제로, 제품의 안전성 평가나 시장 내 위해제품의 감시, 소비자 안전확보 등을 위해 데이터를 적극적으로 수집 및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소비자 또한 다양한 데이터·정보를 자유롭게 접근·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다 능동적인 행위자로서 소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 (디지털 신뢰) 디지털 플랫폼, AI기반 서비스 등 소비생활에 있어 디지털 영향력이 광범위하게 확산됨에 따라 디지털 신뢰성 확보와 소비자 주권 보장을 위한 정책적 노력이 강화될 필요성이 높은 것으로 확인됨
 - 주요 키워드로, 플랫폼, 다크패턴, 개인정보, 디지털 선택권 등이 확인됨
 - 최근 다크패턴, 온라인 플랫폼 중심 소비구조로의 전환 등으로 인한 소비자 권익 침해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소비자의 '자기결정권', '데이터 투명성' 등을 강화하고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 과제를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3.2. 주요 이슈 2: 사회적 가치의 실현

- 취약소비자의 보호와 포용적 소비환경 조성, 지속가능한 소비, 저탄소·친환경 소비와 같은 사회적 가치의 중요성과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확인됨
- (포용적 소비) 소비자정책 각 영역에서 취약계층의 안전 확보, 거래 접근성 및 소비 역량 강화를 위한 과제를 수립함으로써 취약계층의 권익을 보호하고, 이들이 소비환경에서 보다 적극적인 주체로서 행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주요 키워드로, 사회적 약자, 취약계층, 무장애(BF: Barrier Free), 접근성 제고 등이 확인됨
 - 취약계층의 소비 접근성을 강화하거나 고령자·어린이·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게도 친화적인 소비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과제가 다수 수립된 것으로 나타남
- (지속가능성) 각 부처에서는 기후변화와 탄소중립을 위한 친환경 정책과 소비영역에서의 상생협력 및 사회적 경제, 지속가능성 강화를 지향함으로써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는 과제를 상당 수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 주요 키워드로, 저탄소, 환경친화, 지속가능성, 상생협력 등이 확인됨
- 제품 및 서비스, 관광 등 다양한 영역에서의 친환경·지속가능한 소비를 유도하기 위한 과제가 다수 나타났으며, 소비생활에 있어 상생협력 및 사회적경제 가치를 제고하기 위한 정책적 접근 또한 다수 확인됨

3.3. 주요 이슈 3: 공정한 소비환경 강화

□ 신기술·유형 제품 및 서비스의 다양화, 플랫폼 기반 소비의 확대 등으로 인한 소비 구조와 패턴의 변화가 광범위하게 나타남에 따라 이에 대응하여 공정한 소비환경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나타남

○ (공정 소비환경) 정보비대칭을 해소하고 선제적 감시 및 조사를 통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정책들이 다수 나타나는 한편, 시장감시 및 규제 방식에 있어 전통적인 정부주도 규제에서 민관 협력체계 및 자율규제 유도, 정보 투명성 강화 등을 통한 규제합리화를 모색하려는 시도도 확인됨

- 주요 키워드로, 상시 모니터링, 능동적 사고조사, 정보비대칭, 위해제품 차단, 사후규제, 자율규제, 정보공유 등이 추출됨
- 중고차나 부동산 임대차 거래와 같이 정보비대칭 특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과제나 불공정 거래행위의 사전적 감시, 규제샌드박스 사업 대상 안전관리, 민관협력에 기반한 자율규제 유도와 같은 정책적 대응을 통하여 공정한 소비환경을 강화하려는 노력들이 포착됨

〈표 3-1〉 주요 이슈별 핵심 키워드 및 대표 과제 요약

주요 이슈	핵심 키워드	대표 세부과제 예시
디지털 전환 시대의 정책 지향	데이터, AI, 알고리즘, 플랫폼, 다크패턴, 디지털 선택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품안전관리 종합계획(산업부): “데이터기반 능동적 사고조사 추진” - 개인정보보호 기본계획(개보위): “다크패턴 등 신유형 개인정보 침해 대응체계 마련” - 어린이제품안전관리 기본계획(산업부): “어린이제품 안전 정보(Open API) 제공·활용 활성화”
사회적 가치의 실현	취약계층, 접근성, 무장애(BF: Barrier Free), 환경친화, 지속가능, 상생협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품안전관리 종합계획(산업부): “취약계층 제품 공통기준 마련” - 장애인정책 종합계획(복지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 확대” - 식생활교육 기본계획(농식품부): “농식품 소비자의 환경친화적인 식생활 실천을 위한 교육 확대”
공정한 소비환경 강화	상시모니터링, 선제적/능동적 조사, 거래 차단, 사후/자율규제, 정보공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동차정책 기본계획(국토부): “중고자동차 시장 건전성 강화-침수차 불법유통 방지” - 장기주거종합계획(국토부): “부동산 시장 소비자 보호 강화” - 제품안전관리 종합계획(산업부): “온라인 쇼핑몰 불법제품 유통 차단” -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활성화 기본계획(과기부): “초신뢰를 구현하는 핵심인프라로 블록체인 기반 구축”

4. 시사점

□ 타 부처 기본계획의 소비자정책 유관성을 검토한 결과 총 24개의 기본계획 중 161개의 세부과제가 소비자정책과의 유관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됨

○ 각 부처의 고유 정책영역이 소비자정책과 다양한 접점을 가지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대체적으로 제품 및 자동차, 서비스, 식·의약품 등의 안전 관련 정책의 주무부처에서 수립하고 있는 기본계획에서 유관성이 높은 과제가 다수 확인되었으며, 복지부의 경우 환자와 장애인의 안전 관련 정책에서 유관성이 높은 과제가 나타남

- 유관과제가 많은 부처는 산업부(45개)였고, 국토부(36개), 식약처(25개), 복지부(24개) 순으로 나타났으며, 대체적으로 소비자정책위원회 위원기관에 해당하는 부처의 기본계획에서 소비자정책 유관성이 높은 과제를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 소비자정책 영역별로 유관과제를 분류한 결과, 안전 중심의 과제 비중이 큰 것으로 나타나, 향후 7차 기본계획 연계과제 수립시 '안전' 영역을 중심으로 발굴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 유관성이 있는 과제를 소비자정책 영역별로 분류한 결과, '안전' 영역에 해당하는 과제가 87건으로 가장 많고, 거래(40개), 역량(정보)(14개), 피해구제·정책 협력(22개) 순으로 나타남

- 특히, 안전영역에서는 제품 및 서비스의 안전 확보를 위한 체계 구축을 위한 과제나 위해정보를 감시하는 과제, 시장감시를 통한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과제 등에 집중된 경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됨

- 유관성이 있는 과제의 주요 키워드와 내용분석을 통해 파악된 타 부처 기본계획에 있어 소비자정책 관련 주요 이슈는 크게 3가지로 정리됨
 - (디지털 대전환) 안전·거래·역량(정보)·피해구제·정책협력의 전 소비자정책 영역에 걸쳐 데이터에 기반한 관리나 빅데이터·인공지능을 활용하는 과제가 다수 확인되었으며, 다크패턴 대응이나 개인정보보호의 강화 등 디지털 환경에서의 소비자 권익 보호 과제 또한 반복적으로 확인됨에 따라 디지털 대전환이 소비자정책 전 영역에 영향을 미치며 데이터의 활용 및 투명성의 제고, 디지털 피해 예방이 소비자정책에서 핵심 과업으로 부상함
 - (사회적 가치) 고령자·장애인·어린이와 같이 취약계층의 안전 및 접근성을 개선하고 소비영역에서 지속가능·친환경·상생협력과 같은 가치를 반영한 과제가 다수 확인됨에 따라 소비자정책이 단순한 소비자 권익보호를 넘어 포용성이나 지속가능성과 같은 사회적 가치를 실현·제고하는 데에 기여하는 것 또한 중요한 것으로 판단됨
 - (공정한 소비환경) 정보비대칭과 불법유통 취약 분야에 대한 선제적·능동적 모니터링과 차단 조치 과제가 다수 나타난 한편, 시장감시와 규제에 있어 민관협력이나 자율규제, 정보공개 등을 통한 규제방식으로의 전환을 시도하는 과제도 확인되는 점을 두루 고려할 때, 소비자정책 기본계획에서도 시장감시 및 규제를 합리화하기 위한 시도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이상의 분석을 통해 제7차 소비자정책 기본계획 수립에 대한 시사점은 다음과 같이 요약됨

- (안전 영역 중심의 정책 연계성 강화) 타 부처 기본계획에서 안전 영역의 유관성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난 점을 고려하여 7차 소비자정책 기본계획 수립시 안전관리·위해정보 감시·리콜 등의 기존의 주요 정책과제 외에도 신기술·신유형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안전성 강화를 위한 과제를 중심으로 연계과제를 설정하는 노력을 적극적으로 기울일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 (정책 유관성 중심의 협업관계 구축) 주로 소비자정책위원회에 해당하는 부처의 기본계획에서 유관성이 높은 과제들이 집중된 것으로 나타난 한편, 식약처와 같이 위원기관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소비자정책과의 연관성·정책적 중요성이 높은 과제를 다수 수행하는 경우도 확인됨에 따라 정책적 유관성을 중심으로 기관간 협업 관계를 강화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임
- (디지털 대전환 대응) 소비자정책 전 영역에 걸쳐 디지털 대전환의 영향력이 광범위하게 확인됨에 따라 제7차 소비자정책 기본계획 수립에 있어서도 데이터의 활용 및 투명성의 제고, 디지털 피해 예방 등을 중점적으로 수립·관리하는 정책과제를 설정함으로써 소비영역에서의 디지털 신뢰를 제고할 필요성이 높음
- (사회적 가치 실현에 기여) 다수의 부처에서 다양한 사회적 가치를 반영한 과제를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바, 이는 소비자정책이 단순한 소비자 권익보호를 넘어 포용성과 지속가능성이라는 가치를 담고, 이를 실현하는데 기여하는 방향으로 사회적·정책적 역할을 수행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함
- (공정한 소비환경 확립) 7차 소비자정책 기본계획 수립시, 시장감시 및 규제에 있어 적극적·선제적 감시가 필요한 영역과 간접적·자율적 규제가 적합한 영역에 대한 구분을 통하여 규제 합리화를 모색해볼 필요가 있음

[참고 목록]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24). 제5차 개인정보보호 기본계획.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3). 제5차 과학기술 기본계획.
- — . (2023). 제1차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기본계획.
- — . (2023). 제3차 3D프린팅산업진흥 기본계획.
- — . (2024). 제4차 전파진흥 기본계획.
- 국토교통부. (2022). 제9차 국가교통안전 기본계획.
- — . (2022). 제3차 자동차정책 기본계획.
- — . (2023). 제2차 드론산업발전 기본계획.
- — . (2023). 제3차 장기주거종합계획.
- — . (2024). 제4차 스마트도시 종합계획.
- 기획재정부. (2022). 제4차 협동조합 기본계획.
- 농림축산식품부. (2022) 제2차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활성화 기본계획.
- — . (2023). 제4차 식품산업진흥 기본계획.
- — . (2025). 제4차 식생활교육 기본계획.
- 문화체육관광부. (2023). 제2차 국민여가활성화 기본계획.
- — . (2023). 제6차 관광진흥 기본계획.
- 보건복지부. (2023). 제2차 환자안전 종합계획.
- — . (2023). 제3차 보건의료기술육성 기본계획.

- — . (2023). 제6차 장애인정책 종합계획.
- 산업통상자원부. (2023). 제5차 제품안전관리 종합계획.
- — . (2023). 제3차 지능형전력망 기본계획.
- — . (2025). 제4차 어린이제품 안전관리 기본계획.
- 식품의약품안전처. (2025). 제3차 식품 등의 기준 및 규격관리 기본계획.
- — . (2025). 제6차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 종합계획.
- — . (2025). 2025년 의약품·마약류 제조·유통관리 기본계획
- 여성가족부. (2023). 제3차 양성평등 기본계획.
- — . (2023). 제4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
- — . (2023). 제7차 청소년정책 기본계획.
- 행정안전부. (2023). 제4차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기본계획.
- — . (2025). 제5차 국가안전관리 기본계획.
- 사지연. (2022). 신 정부 국정과제 내 소비자정책 유관 내용과 대응 방안. 소비자정책동향 제125호.
- 정영훈. (2023). 2023년 정부부처 업무계획 상의 소비자정책 유관 과제와 시사점. 소비자정책동향 제129호.
- 유나영. (2024). 2024년 정부부처 업무계획 상의 소비자정책 유관 과제와 시사점. 소비자정책동향 제137호.

*본 연구의 내용은 연구자 개인의 견해이며 공식 견해가 아닙니다.